

만18세 청소년

투표권 행사 이후의 이슈토론



토론
제21대
국회에게 바라는 점

사회 :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 학회장

발표1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김찬영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

발표2 청소년은 시민이자 사람이다.
홍승우 민주학교를 위한 연구모임 대협 부장

발표3 청소년들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른 것이 아닐까?
김수빈 고양시청소년의회 부의장

발표4 청소년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박정원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

발표5 국회의원 당선인이 알려주는 현명한 유권자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
홍정민 제21대 국회 고양병 당선인



“만18세 청소년 투표권 행사 이후의 이슈토론”

사회: 송보희(한국청년정책학회 학회장)

시간	구분	주제
16:00 ~ 16:05	개회	포럼 개회선언 -포럼 진행방법 및 내용 안내
16:05 ~ 16:10	소개	참여 패널 및 좌장 소개 박윤희 대표이사 축사
16:10 ~ 16:17	발제	만18세 선거권 그리고 청소년의 삶 - 박정원(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
16:17 ~ 16:55	주제 발표	만18세 청소년 투표권 행사 이후의 이슈 토론 - 발표 김찬영(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 홍승우(민주학교를 위한 연구모임 대협 부장) 김수빈(고양시청소년의회 부의장) 박정원(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
16:55 ~ 17:05		국회위원 당선인이 알려주는 현명한 유권자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 - 홍정민(제21대 국회 당선인)
17:05 ~ 17:17	토론	주제토론 청소년이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점
17:17 ~ 17:25	질의 응답	실시간 시청자 질의응답 (시청자와 소통 진행)
17:25 ~ 17:30	폐회	포럼 폐회선언

(발제)만 18세 선거권 그리고 청소년의 삶

박정원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

우리는 참정권 보장의 여부를 독재국가와 민주국가를 구분 짓는 가장 큰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4조, 제 25조 이 두 조항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는 참정권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14일까지 이러한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연령층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입니다. 왜 청소년들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 것인지 그 누구도 합리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발제에서 만 18세 선거권에 관한 몇 가지 논지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얻을 수 있게 된 과정은 무엇인지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2020년 4월 15일 제 21대 총선, 만 18세에게 투표권이 처음 부여된 총선이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권리는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1992년 대통령 선거, 고등학생 활동가들이 '16세 선거권'을 주장하면서 선거권 연령 인하에 관한 논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2002년 대통령선거, 명동에서는 사상 첫 청소년 모의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2004년, 현재 경기도의원인 신정현의원의 주도 아래 <18세 선거연령 인하 국민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2008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기호 0번 청소년후보 만들기 운동>이 벌어지면서 선거권 연령 인하라는 논제에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시민단체에서 만 18세 참정권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청소년은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목소리가 무시당했지만, 좌절하지 않았기에 얻어낸 권리입니다.

청소년들의 투표의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만 19세 투표권이 적용되고 있던 지난 제 19대 대선 당시 만 19세 유권자의 약 75%가 투표장으로 향

한 것을 보면 청소년들의 투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 투표율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나흘간 19세 청소년 70명을 대상으로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한 청소년 참정권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84.3%의 청소년들은 투표 참여에 대해 “무조건 한다” 등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부정적인 입장은 4.3%에 불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청소년들의 투표 의지는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약 40%의 청소년들이 선거 연령 인하 사실을 모른다고 답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홍보가 왜 부족했던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견을 국가에 피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피력하는 수단이 투표인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그동안 어리고,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치인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고, 무시당했습니다. 거대 양당에게 청소년은 소모품에 불과했고, 총선, 대선이 끝나면 청소년들의 현실은 보려 하지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의 현실을 누군가 이야기하면 ‘어리니까 모르는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말에 복종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15일을 기점으로 청소년들의 권리는 증진되었음이 확실합니다. 유권자가 된 청소년들은 이제 표로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학생들의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입시정책을 정착시키는 역할을 청소년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투표권의 부여는 우리 삶의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데? 여러분께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만에서는 2005년 중·고교생들이 ‘반발금’(두발 규제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인터넷에 두발 규제 반대 토론방이 생기자 회원 수가 순식간에 10만명 가까이 불었고 ‘학생 두발 규제 금지 자치협회’까지 결성됐습니다. 당시, 대만 교육부는 “두발 규제는 권위주의 통치의 잔재로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며 두발 규제 전면 폐지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994년부터 매년 전국 지역구에서 뽑힌 어린이 의원 500

여명이 모여 법률안을 내고 최우수 법안을 뽑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이 법안을 공식 법률로 만들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어린이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나라에서 어린이 노동으로 만든 학용품 구매 금지법’ 등 4개 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칠레와 네덜란드에도 이러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청소년들은 어리숙하고, 미숙한 존재가 아님을 입증합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모의투표, 각 시의 청소년의회 등을 제외하면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할 만한 교육이 전무합니다. 어쩌면 학생들이 자신의 정치적 주관을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사와 언론의 선동이 학생들의 정치적 주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정치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러한 선동에 더 휩쓸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은 교육의 목표입니다. 정치 중립적인 선거 교육, 정치 참여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우리 삶에 직결된 사회적 요소입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정치인에 의해 지역 사회가 변화하고,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청소년은 이러한 사회 변화와 삶의 변화를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투표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정치인에게 무시당했고, 언제나 교육 정책의 실험 대상이 되어야만 했던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견조차 피력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청소년에게 투표권이라는 의견 피력의 수단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치는 어른들의 점유물이 아닙니다. 제 21대 국회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되고, 19금 정치가 아닌 전체 이용가의 정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바라볼 때, 사회는 변화할 수 있는 젊은 동력을 갖게 됩니다.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이제는 청소년이 주동적으로 나설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김찬영(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

안녕하세요,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 김찬영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만 18세 선거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주시고, 작년 2019년 국회의원 열여덟분이 발의해주신 덕분에 작년 12월 27일 만 18세 선거권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제 21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동안 많은 국회의원 분들, 그리고 많은 정당들에서 이전의 제 20대 총선보다 조금이라도 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제게는 투표권이 없었지만, 대한민국 정치에 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총선공약에 반영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분들께서 청소년을 더 이상 아이가 아닌 동등한 유권자이자 어른으로 봐주신 점이 굉장히 기쁩니다.

다만, 정말로 아쉬웠던 점은 말 그대로 ‘만 18세 선거권’ 이여서 아무리 올해 2001년생, 고 3이더라도, 선거일 이후가 생일인 경우 선거권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과 늘어난 54만여 명의 유권자들에는 이미 고등학생이 아닌 이미 성인인 생일이 늦은 2000년생들도 포함되는 숫자였기에 그들이 무조건 고등학생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어, 청소년 유권자들의 영향력이 적기에, 그만큼 청소년과 관련된 좋은 정책들이 나오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21대 국회의원 분들께 저희,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교육과 연관된 교육감, 대통령선거 만큼이라도 저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 17세 선거권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만 18세 선거권이 통과되기 전부터 고등학생들이 투표하기에는 어리고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청소년이 어리고 미성숙하다 볼 수 없는 이유로, 3.1운동의 주역이신 유관순 열사께서 항일운동을 하시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신 나이가 17세, 4.19 혁명의 주역이신 고 김주열 열사님은 당시 15세로, 청소년은 이미 정치적 주체로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서 개혁과 변혁의 주역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이미 저희는 자신의 의견정도는 당연히 내세울 수 있고, 어느 후보가 자신에게 알맞은지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로 나아가는 길은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정치를 익숙하게 접하고 관심을 가질수록 더욱 발달합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아직 이르다는 이유로 정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커서도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며 점점 사회로부터 고립됩니다. 게다가 한국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에 노인들의 투표권이 훨씬 많아져 세대 중심의 정책이 노년층으로 바뀌므로, 더 많은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이자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참정권은 모든 국민에게 주어져야하는 공적인 권리로, 어떻게 하면 더 줄여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은 시민이자 사람이다.

홍승우(민주학교를 위한 연구모임 대협 부장)

긴 진통 끝에 국회에서 공직 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되며 선거권 연령이 인하 되었다. 역사적인 순간이라 할 수 있다. 고3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여러 논쟁이 오갔다. 그 논쟁의 주요 쟁점은 ‘과연 만18세가 투표할 만큼 성숙한가’로 요약할 수 있다. 필자는 이를 ‘청소년 혐오’ 담론이라 생각한다. 왜 이 논쟁을 청소년 혐오로 정의한 이유는 무엇이며 선거권 연령 인하의 의미를 살펴보고 청소년 삶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각자 무얼 해야 할지 나름의 생각을 밝히며 마무리하겠다.

0)왜 이 논쟁을 청소년 혐오라고 하는가.

:청소년 혐오란 무엇인가

먼저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자. 여기서 등장하는 ‘혐오’는 ‘혐오주의’를 뜻한다. 혐오주의의 사전적 정의는 보면 어떤 대상을 극단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고방식이다. 자세히 설명하면 대상에 대한 혐오, 비하, 차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 사회가 ‘혐오’라는 단어를 기피하기 때문에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혐오’는 특정 대상에 대한 비하, 차별을 포괄적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에 현 상황에 맞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 대상과 ‘혐오’를 합성한 것은 그 대상이 겪는 불합리함과 부당함을 개념화 한 것이다.

한국 청소년 사회를 살펴보자. 현재 한국에서의 청소년은 일상 속에서 청소년 혐오와 지루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가령 교복 착용, 화장 금지를 두고 교사와 학생들 간의 충돌을 예로 들 수 있다.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행해지는 인권 침해적이고 청소년 혐오적인 교육 제도와 교칙,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은 단순 청소년들 만의 주장이 아니다. 각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제정은 제도적으로 학생 인권을 보장받아야만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청소년 혐오는 오늘날 불쑥 튀어나온 개념이 아

니다. 혐오와 차별에 익숙해진 우리가 청소년들이 겪는 불합리함과 부당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청소년 혐오’프레임에 갇힌 우리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한 뉴스가 나오자 온 사회가 떠들썩했다. 투표권을 줘야하니 말아야하니 하면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그 중 핵심적인 논쟁은 ‘청소년은 과연 투표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정신적으로 성숙한가’이다.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정신의 성숙도를 따지는 것은 한국의 연령주의가 발동한 것이다. 이는 곧 청소년을 ‘미완성의 객체’로 여기면서 ‘애들이 뭘 안다고 투표를 해’와 같은 청소년 혐오로 이어진다. 이러한 주장은 반대 측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찬성 측의 주장은 어떨까. ‘청소년은 투표를 할 만큼 성숙해’로 맞받아친다. 이와 함께 드는 근거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보여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다. 결국 어떤 정치적 이슈에 있어 민감하게 반응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 국정농단이라는 정치적 이슈가 없었다면 찬성 측은 어떤 근거를 들이밀었을까. ‘청소년은 그동안 성숙하지 않았지만 이젠 성숙해’라는 논리가 과연 청소년 친화적인 논리일까. 또한 촛불시위에 참여한 학생은 성숙하기 때문에 광화문에 간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찬성 측은 명쾌하게 답할 논리가 없다. 결국 찬성하는 사람들도 반대 측과 같이 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2)왜 만 18세 선거권이 중요한가.

:20년 만에 열린 창구

과거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와 고민이 현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가장 큰 고민은 대입일테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 생활이다. 학교는 내가 살아가는 또 다른 삶의 터전으로서 적어도 진로 외의 걱정 없이 지내야 마땅하다. 그러나 위에서도 서술했듯이 그동안 청소년은 미성숙한 객체로서 늘 ‘을’의 위치에 있었고 그들의 불편함과 억울함은 매우 당연시 여겨졌다. 복장 규제와 용모 규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처벌과 성적 그리고 집안 재력에 따른 차별에 대응하기에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조직이 힘들었다.(단체 행동에 따른 처벌 규정이 있었기 때문)겨우 조직해

서 우리가 아무리 외쳐봤자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줄 사람이 없었다. 청소년에게 관심을 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청소년에게 관심을 줘서 당장 본인이 얻을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라도 이 대상을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청소년 사회에 산적한 문제는 많고 많은 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그대로 전달되었어야 했으나 엘리트 청소년들과 정치인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만큼 투표권 행사를 통해 본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자 의미가 되었다. 청소년 사회에 있는 다양한 청소년들이 각자의 외침을 알아주었음 하는 간절함이 선거권 연령 인하라는 어젠다로 집합한 것이다. 그 누구보다도 청소년들은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올지 잘 알고 있다. 간절한만큼 제일 깊게 고민했을 대상이기 때문이다.

3)만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성숙한 객체가 아닌 존엄한 객체로서의 참여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라고 한다. 그러나 보통, 평등 선거에 입각해 선거를 치룬 역사를 그리 길지 않다. 과거의 여성과 흑인은 투표에서 배제되며 투명인간이 되었다. 그들이 투표에서 배제된 이유는 투표권이 있는 부유한 중장년 남성들이 미개한 객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특정 소수만 참여하는 선거는 민주주의 후퇴를 야기했다. 선거와 투표는 사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며 공동체의 발전이 아닌 소수만의 기득권 유지로 이어졌다. 과거 유럽의 남성 중심의 엘리트주의가 팽배했던 이유도 그와 같다.

여성과 흑인들의 처절한 투쟁 끝에 투표권을 쟁취하면서 민주주의는 한 단계 발전했다는 평을 받는다.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은 민(民)이다. 모두가 인간으로서 얻는 자격이다. 그 누구도 차별받거나 소외되어선 안된다. 그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야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와 같은 말을 고리타분하게 느낄 정도로 상식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 상식에 청소년은 배제되어있었고 긴 시간의 싸움 끝에 민주주의라는 울타리 내에 인간으로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이 어찌되었든 선거권 연령 인하는 인간임을 증명하는 또 다른 징표가 되었다. 청소년이 성숙한 객체임을 증명하지 말아라. 존엄한 객체로서 이제야 제 권리를 찾은 것 뿐이다.

4)앞으로 전망은...

:앞으로 청소년들의 삶은 어찌 변하는 것인가.

당장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다. 당장 이번 선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 이유로 당장 만 18세 유권자들의 표심이 본인의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30~50대의 투표가 선거 당락을 좌지우지 하는 선거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만 18세 유권자를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 유권자의 등장은 매우 의미 있지만 우리가 생각한 만큼 큰 힘을 발휘하진 못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와 별개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어느정도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법과 정치에 나오는 이상적인 삶에 정치가 녹아든 모습을 꿈 꺾 볼 수는 있겠다. 또한 당장 53만명의 만 18세 유권자가 생겼지만 대부분은 고3으로서 청소년의 삶보단 청년의 삶에 무게를 두고 본인의 가치관을 설정한다. 이는 만 18세 유권자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초/중/고/학교 밖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만 18세 유권자의 투표가 청소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첫 째, 학교의 정치판을 우려하는 다수의 사람들 때문에 교육의 기계적 중립성이 더 강해질 것이다. 이는 요즘 핫한 교육인 ‘민주시민교육’의 단조로움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재미없고 비효율적인 수업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의 세부적인 내용을 건들이다보면 아무래도 중립성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에 혐오가 가중 될 수 있다. 당장 만 18세 유권자의 표가 당락을 좌지우지 하진 않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괜한 화살을 돌릴 대상이 하나 더 생김에 따라 이런저런 비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셋 째, 의견을 밝힐 창구가 확실히 보장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청소년 어젠다가 등장할

것이다. 공론화가 되어야만 하는 여러 주제들이 힘을 얻고 수면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설정한 어젠다에 정치권은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청소년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과 정치권의 협력이 라는 스타트를 잘 끊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5)앞으로 대안은...

:국회의원은 관심 갖는 척 하지 말고 진지하게 청소년을 바라봐야 할 것

이제 국회의원들만 움직여주면 된다. 지난 20년간 여러 청소년과 청소년단체들은 여러 방법으로 선거권 연령인하의 필요성을 말해왔으며 이제는 제도권이 응답해야 할 때이다. 왜 꼭 제도권, 국회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다수의 청소년 어젠다는 입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청소년 사회와 시민 사회만의 움직임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청소년의 몫은 그저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외치는 것이고 정치는 이를 듣고 수렴 해 그들이 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국회가 일을 잘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문제는 대부분 소통과 토론없이 이뤄지는 일방적인 입법 및 행정이 주 요인이다. 주요 정책을 이해 당사자와의 교류 없이 불도저식으로 추진한다면 현장감과 효율성 모두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회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경청’을 일삼는데 정말로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는 ‘토론’이 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직접 만나고 듣고 같이 고민하고 얘기해야 한다. 청소년이라는 대상에 여태껏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만큼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이론적인 해결책을 내놓기보다 원론적이지만 ‘만남’이라는 제안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없어 보인다.

국회와 청소년이 만나는 시점에서 우리 성인사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변화는 큰 변화이고 이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토론한다면 답이 나오겠으나 한

가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될 대전제가 있다. 어떤 부작용이 나오더라도 ‘투표권 괜히 줬다, 다시 뺏자’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본인 뜻에 맞지 않는 선택을 했다고 청소년을 욕할 수는 없다. 이 또한 민주주의가 성장해가는 과정이라 여기고 상생하고 협력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필자는 감히 청소년들에게 한 가지의 잔소리를 하고 싶다. 청소년은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선거는 본인 삶에 아주 사소하더라도 작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임을 인지하고 사회와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 보다 이해당사자들끼리 모여 토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서로 듣고 공감함으로써 갈등을 조정하는 것 자체가 정치이기 때문에 좋은 정치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마스터키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6)마무리 하며...

청소년 혐오 담론에 얼룩진 청소년 참정권의 본 의미를 다시 찾고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 그들의 찬/반 논리로써 설명될만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소년 참정권이 청소년 혐오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믿었던 만큼 혐오주의의 논리로 의미를 왜곡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한다. 그간 청소년 참정권을 위해 어떤 노력과 투쟁을 해왔는지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친 청소년 어젠다가 없는지 살펴보는 평가의 시간을 가짐으로서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여러 역기능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 속에서 새 임기를 시작하는 국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 사회에서 큰 힘을 갖고 있는 만큼 적절한 곳에 권력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여러 대상과 우선 직접 만나서 서로를 알아야 하고 알아가야 한다. 토론을 통한 서로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정책과 입법이 교과서에 나온 이상적인 시민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거창하게 얘기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당장 모든게 바뀌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주의란 모두가 평등하게 싸울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

청소년은 이제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청소년 인권 쟁취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청소년들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른 것이 아닐까.

고양시청소년의회 김수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긴 시간을 지나 인정받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만 18세가 선거권을 부여 받음으로서 이제 청소년 또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인정받았다고 생각했으나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약들을 보았을 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청소년을 공약하기 위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정책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해서입니다.

18세 선거권이 인정받은 해 실시된 선거에서조차 청소년을 겨냥한 공약이 제대로 없다는 점에서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다고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청소년을 정책의 대상이자 주체로 한 정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회의 역할에는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포함되어있고, 청소년도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반려동물 관련 정책보다 적다는 것은 정책에서 등한시 된다는 것으로, 국회에서는 우리 청소년 보다 반려동물을 우선시 했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관련 연구와 조사 및 정책수립을 위하여 설립된 국책연구기관도 있는데 어째서 그 정책들이 청소년들의 보호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는 그리고 의회는 선거권을 부여받은 청소년에게도 성인 유권자들과 같은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제공하고 동등한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아야하며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나타나있습니다. 사회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올바른 교육을 제공해 주어야합니다. 현재 의무적으로 정치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그 교육의 양도 질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전북일보의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기사

에서 ‘학교 내 정치 교육 활성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찬성(90.5%), 반대(8.4%)로 대부분의 학생이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음에도 학교 내 정치 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청소년의 교육을 전적으로 국회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의회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요구 속에서도 정치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현재 사회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꺼내면 진지충, 정치충 등의 단어로 불리게 되고, 정치에 관한 내용은 웬만하면 꺼내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룰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는 내용도 많이 없을뿐더러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아직 청소년들을 주체적인 민주시민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분위기에서 18세 선거권, 더 나아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해 당장 평가를 내리기 보다는 사회는 당장 청소년들이 시작할 수 있는 정치 활동과 앞으로 가져야할 올바른 가치관 등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의무교육이 시행되도록 의회에서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21대 국회 의원 분들께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얘기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고양시청소년의회 박정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 청소년의회 의장 박정원입니다. 2020년 4월 15일은 대한민국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매우 역사적인 날이었을 것입니다. 만 18세에게 처음 투표권이 부여되는 날이었기 때문이지요. 저는 오늘 이 토론에서 만 18세 선거권과 함께 부수적으로 존재하는 몇 가지 논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소년들이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로부터 받아왔던 차별적 대우와 무관심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정치인들로부터 그 어떠한 차별대우를 받아서도 안 되며, 그 어떤 정치인도 우리의 삶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정치인들이 보여준 모습,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준 국민 정도로 치부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시다. 예시가 굉장히 많습시다만,

몇 가지를 좀 추려보겠습니다. 제 20대 총선에서의 당시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의 공약집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공약입니다. 95쪽부터 100쪽까지 '맞춤형 복지-우리 아이'라는 이름으로 공약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공약은 2개에 불과합니다. 부수적 정책까지 합치면 모두 6개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학부모 혹은 유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사실상 중·고등 학생만을 위한 정책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역구 별로 현안에 맞추어 공약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당 차원에서 내놓은 공약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약, 6개뿐입니다.

251쪽 분량의 공약집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분량은 5쪽에 불과합니다. 당시 야당이라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47쪽부터 시작되는 '제 3장-사회 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부분, 52쪽에 청소년과 관련한 정

책이 두 개 있습니다. 부수적인 정책들까지 포함하면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6개입니다. 또한, 사회 계층 별 공약을 분류해 놓았다고 볼 수 있는 ‘정책 이슈 스토리’부분에 청소년에 관한 언급은 일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두 공약집만 보아도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청소년에게 무관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 민주당입니다. 2016년 나온 미국 민주당 공약집 ‘Party Platform’에는 청소년 공약이 많이 있습니다. 총 45쪽 분량의 공약집에서 청소년의 관한 공약은 27쪽부터 29쪽 그리고 31쪽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민주당의 경우 청소년들을 위한 공약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정합니다. 미국의 공화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섹션별로 분류한 공약 중 ‘Section 6’에 청소년을 위한 공약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공약의 개수로만 봤을 때 한국 거대양당의 거의 세 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미국 정당들의 청소년을 위한 공약은 한국의 정당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만 18세에게 처음 투표권이 부여된 선거인 제 21대 총선,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2016년 제 20대 총선에 비해 거대 양당 중앙당의 청소년 공약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경우 357쪽 분량의 공약집 중 260쪽 단 한 쪽에만 아동·청소년 관련 공약이 있습니다. 아동 보육과 관련 된 공약이 두 개, 어린이 보호와 관련된 공약 한 개, 아동 발달과 관련한 공약 한 개, 대학 입시와 관련된 공약 한 개로 총 다섯 개입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공약은 두 개, 부수적인 정책의 개수는 네 개입니다. 4년 전보다 두 개가 줄었습니다. 참고로 반려동물 관련 공약은 세 쪽 분량이며, 공약 12개, 부수적 정책은 16개입니다. 미래통합당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대 분야 151개 실천과제 중 4개의 공약이 청소년의 몫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공약은 2쪽 분량으로 두 양 당의 반려동물 관련 공약보다 청소년공약이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인 고양시 갑 지역의 두 양 당 후보의 공약집에는 청소년 관련 공약이 두 개 혹은 한 개 있습니다. 모두 학교 증축,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센터 유치 등입니다. 만 18세 선거권이 부여된 지금

까지도 정치인들은 청소년의 삶에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있다면 청소년의 열악한 삶을 파악하고 새로운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이제까지 보여준 무시, 무관심이 청소년들이 선거권의 부여를 갈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묻지도 않고 만드는 청소년을 위한 공약, 전혀 실효성 없는 그리고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지 않는 공약들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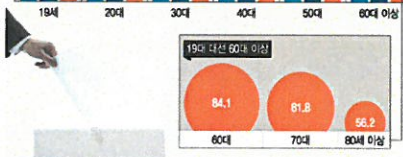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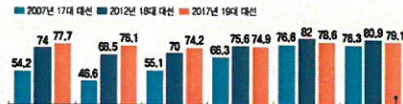
코로나 19로 인한 개학 연기의 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학부모와 교사들에게만 묻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감염 위험성이 있다면 연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러나 연기는 하더라도 개학 연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학생들에게 또한 설문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설상 정해진 답이었을지라도, 한 번쯤은 물어보는 것이 맞았습니다.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선거권이 없다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의 899만 청소년들은 묻습니다. 유권자만 정치인들이 말하는 국민인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유권자가 아니어서 그 동안 받았던 무시, 이제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만 18세의 이러한 물음에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제17대·제18대·제19대 대선 전체 연령대별 투표율 (단위: %)



19대 대선 성별·연령대별 투표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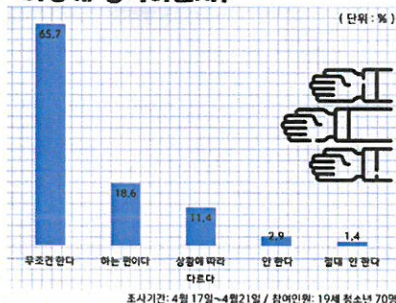
	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남자	74.8	75.4	71.1	71.7	71.4	72.9	77.9	85.2	86.1	70.8
여자	80.9	79.1	79.0	77.1	77.0	77.0	79.3	83.1	78.5	49.5
전체	77.7	77.1	74.9	74.3	74.1	74.9	78.6	84.1	81.8	56.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래픽: 유영수 디자이너

- 2017년 제 19대 대선, 만 19세 유권자의 투표율은 77.7%
- 전국 투표율인 77.2% 상회
- 50대, 60대 이상 유권자 제외하고 가장 높은 투표율

고양시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본인의 투표에 대한 참여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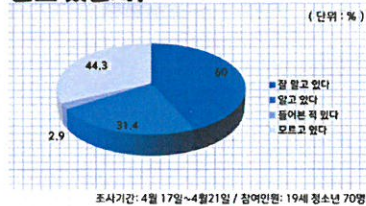


조사기간: 4월 17일~4월 21일 / 참여인원: 19세 청소년 70명

- 제 21대 총선 투표 후 실시된 토당청소년수련관의 설문조사에서 고 3 청소년 70명 중 84.3%가 투표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
- 청소년의 투표 참여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증거가 됨.

다만..

투표권 18세 하향 사실 알고 있는지?



- 투표일이 이를 이상 지난 시점에도 44.3%의 고 3들이 투표권의 하향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함
- 왜 홍보가 부족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홍보가 더 잘 될지에 대한 고찰 필요

청소년 정치 참여 후 사회가 변화한 사례는?

타이완

반발금 투쟁

고 3 학생이 주도

프랑스

어린이 의원
정책 발의 제도

어린이들이
국가의 정책 4개
만들

만18세 참정권, 그리고 청소년의 삶

정치 중립적인 선거 교육 실시

정치 참여교육의 활성화



정부의 역할

청소년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기회 마련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고양시 토당청소년수련관, 머니투데이, 오마이 뉴스